

남북 협력기금 1조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댄 되고 문제인 정부가 하면 안된다?

예결위 전체회의

한국당 “北 퍼주기 짹짹 예산” 민주당 “이전 정부도 비공개” 靑 김수현 실장에 집중 질의도

여야는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격돌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이 비공개된 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정부 방침을 옹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짹짹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한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연석 의원은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엔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

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논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원

전 폐기라기보다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편성한 1조977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외교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예산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선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외통위 차원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재정 추계나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외통위의 추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겨진다. /박지경 기자 jkpark@

“선거제·판문점선언 비준 빅딜해야”

정동영 평화당 대표 취임 100일 회견...“협치 필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선거제도 개혁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빅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한 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 통과 협조는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받아내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해주는 통 큰 협치를 국민이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넘기면 집권 3년 차에 들어간다. 작게는 정권을 위해, 크게는 국민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여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을 넘기면 유아무야 몽개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과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제도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점심을 함께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철통 공조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손 대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었다”며 “이제 문 대통령께서 한 발 더 움직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내정 및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중심에 김수현 실장이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정과 함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인사 청문회 속도조절

경제부총리 후보...민주, 예산안 처리 후 내달초 개최 방침

여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5일께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2일 “예산심사를 마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야당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청와대도 인사청문회 요청은 송부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 후 2~3일 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 같은 절차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12월2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3일이나 5일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은 오는 16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예산심사 이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방침에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청문회를 왜 미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 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쌀 목표價’ 공방

여, 정부안 19만6000원 제시 ... 야 “수용 불가”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19만6000원(80kg당)의 쌀 목표가격 기준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가 인상을 우려해 목표가를 산정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정부 입장을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준의 모호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당정이 선정한 목표가 19만6000원은 최종 가격이 아닌 앞으로 논의를 위한 가장 낮은 수

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바른 농정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여야가 쌀값을 어디서 시작하는지 정하면 될 일”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못했다고 하는데, 건국 이래 쌀값이 20만원 넘어선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어느 정부에서도 넘어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를 기본으로 해서 국회에서 충실히 지혜를 모아서 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떨어지는 협치

보수2야,靑 인사 반발...여야정협체 후속 협의 불참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내용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3개 교섭단체 사이의 실무 협상이 이른바 ‘경제 투톱’ 인사 등에 반발한 야당의 불참으로 불발했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

체의 지난 5일 합의내용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없는 임명을 자제해 줄 것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중환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선행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할 것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신속처리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

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